제16강 불살생계의 파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룹 프로젝트]

(1교시)J_stJo01_031213_4_01

1. 계율의 성립

계율은 **불자가 지켜야 할 모든 생활 규범**을 총칭하는 말

불교 경전 숫타니파타를 보면 중도주의적 계율관을 볼 수 있다.

2. 계율의 변천

계율은 초기에는 관습법 혹은 승단의 암묵적 규약으로 존재하다가 차츰 성문화되었다.

3계-4계-5계-10계로 구체화, 세분화되었다. 이는 팽창하는 교단 가운데 생겨나는 더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계율이 중시되었고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파계 정당화 가능성

사분율의 비구계 제정 목적

① 승단을 화합토록 하며, ② 승단을 즐겁게 하며, ③ 승단을 안락하게 하며, ④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며, ⑤ 이미 믿는 자를 더 믿게 하며, ⑥ 포악한 자를 바로잡으며, ⑦ 참회하는 자를 안락하게 하고, ⑧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하며, ⑨ 미래의 번뇌를 끊게 하며, ⑩ 불교를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다.

계율의 목적은 결국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에 있다. 따라서 **만약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계율을 파계할 수도 있다. 즉, 깨달음을 향한 의지적 요소가 강하고 그것이 올바르다면 파계가 가능하다.** 물론 파계의 공식적 용인은 하지 않았다. 이는 계의 기능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불살생계

불살생계는 가장 무거운 계율인 오계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만큼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계율이란 뜻이다.

불교에서는 왜 생명을 사랑하는가?

생명을 해치는 것은 인간 무명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명은 연기의 법칙을 깨닫

지 못한 상태이며 고통의 원인이 된다. 윤회를 바탕으로 한 공간적 연기의 개념은 타인과 나, 다른 생명과 자신이 서로간의 인과성에 있음이다. 따라서 생명에의 손상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연기적인 관점에서 무명을 피하기 위해 불살생계를 지계한다.

(2교시)J_stJo01_031213_4_02

5. 불살생계의 지계와 파계의 역사적 분석

◎ 호국불교

불력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불교신앙의 한 형태

(1) 신라시대

신라에서의 불교는 그 도입부터 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며 이는 호국불교의 전통이 생성되는데 있어 기본적인 여건을 제시한다.

'세속5계'를 보면 불교 교리에 일부 반하고 있으며, 또 불살생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시의 호국불교는 민중의 고통이나 안위보다는 지배 권력과의 연계에 더욱 비중을 둔 '왕실호국불교'의 측면이 강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불교 역시 왕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호국적 전통을 이어나갔으나, 보다 주술적이고 의례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간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고려 불교의 호국 신앙이 주술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 많은 승려들의 의병활동도 있었다.

(3) 조선시대

조선 건국의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불교는 사라져야 할 전 지배층의 이념으로서 배척당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인 억압으로 인해 가늘게 그 맥을 이어나가면서도 임진왜란 등 여러 전투에서 의병들이 크게 활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6. 현대 티베트 불교, 달라이 라마와 비폭력주의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이 아닌 '정치적 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철저히 비폭력적이다.

그는 **진리와 정의, 자유와 민주는 결코 폭력으로써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폭력적인

방식의 성공은 분명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비폭력적 방식은 다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효과와 지속은 폭력보다 우월하며, 갈등의 해소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그의 비폭력 노선에도 문제점은 있다. **실제 정치의 영역에 있어 대항폭력의 포기는 피억압자에게 부조리한 구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없애는 것일 수 있고 생존에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불교는 기본적 도덕 원칙의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리적으로 바람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불살생계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티베트와 같이 폭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억압자의 생존을 위해 대항폭력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문제가 된다. 이렇듯 기능주의적 입장은 그 적용 영역이 보편적이지 못하다.